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043
----------	------

발의연월일 : 2020년 10월 30일

발 의 자 : 김인호,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 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 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의원(109명)

## 1. 주 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 제출 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금번 정기국회 통과와 지방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도입 범위에 기초의회 포함 등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강력히 촉구함.

## 2. 제안이유

- 정부는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20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정부가 신속하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제출했고, 국회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상정, 법안소위 심의 등이 이뤄졌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숙원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금번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 재적의원 총수 범위 내에서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도입 범위에 기초의회를 포함해 줄 것 등을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임.

## 3. 이 송 처

-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이한다. 예로부터 이립(而立)은 ‘스스로 뜻을 세우고 설 수 있는 나이’ 라 했으나, 아직까지 지방의회는 그 나이에 걸맞지 않는 대내외 환경에 직면해 있다.

지방의회는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없는 열악한 의정활동 여건 속에서 단체장의 전횡과 독주를 견제·감시하고, 주민들의 복잡·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방자치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그러나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 구조 속에서 강시장-약의회형의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단체장의 권한은 비대해진 반면,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 위상과 지원체계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분권형 개헌’ 과 ‘강력한 지방분권’ 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의 시대를 열 것” 이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한 데 이어, 2018년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20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서울시의회가 시민사회 단체와의 오랜 논의를 거쳐 마련한 자정결의안의 이행뿐만 아니라 여·야를 비롯한 국회, 청와대, 정부 등을 상대로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분주히 뛰었던 각고의 노력마저도 수포로 돌아갔다.

그나마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정부가 신속하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제출했고, 국회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상정, 법안소위 심의 등이 이뤄졌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한 데 모여 k-방역체계를 세계의 모범으로 만들어 냈다. 지방정부의 창의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단연코 그 선두에 있었음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특히 지방의회는 민생경제 긴급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조례 제·개정과 추경예산의 신속 처리 등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일조했다.

이제는 지방이 국가의 경쟁력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정립의 정도가 진정한 자치분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다. 중앙과 지방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체계가 되어야 한다. 특히 두 개의 수레 바퀴로 일컬어지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또한 대등한 권한배분과 상호간의 균형 속에서, 주민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은 물론이고 상호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제20대 국회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립의 나이에 걸맞은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최소한의 물꼬를 제21대 국회가 터주길 요구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지방의회의 열망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해 금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고, 30여 년째 답보상태인 지방의회의 숙원과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회와 중앙정부는 재적의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도입 범위에 기초의회를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와 중앙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이자 지방정부의 두 수레바퀴인 지방의회와 단체장 상호간의 견제·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는 수평적 분권을 통해 대통령이 선포한 강력한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0. 10. 30.

서울특별시의회의의원 일동